

기사 게재 일자 : 2009년 04월 28일

## “4대강 사업 성공추진 지자체에 인센티브”

대통령자문 지역발전위 최상철 위원장

방송배기자 [bsb@munhwa.com](mailto:bsb@munhwa.com)

“‘4대강 살리기’뿐만 아니라 4대강 유역의 인접 50개 시·군 발전의 청사진도 마스터플랜에 담을 예정입니다.” 최상철 대통령자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4대강 사업은 국토개조를 통해 지역발전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지역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4대강 살리기를 통한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운하를 하려면 터미널 같은 시설을 만들어야 하고 수심과 강폭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역마다 다르다”면서 “강을 파다가 암반이 나오면 파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淤)설치에 따른 수질오염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 그는 “보를 설치하면 유속이 느려지고 부영양화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16개의 보 중에 절반 이상을 개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4대강 살리기 추진과정에서 현안으로 떠오른 강 유역 농경지, 경작지 보상문제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해양부에서 보상대책반을 꾸려 강에 유입되는 경작지는 대체농지를 마련하는 등 생활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4대강 살리기와 정부가 추진중인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의 상관관계를 묻자 “4대강 살리기는 초광역적 정책으로 두 사업을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지역발전 정책과 4대강 살리기는 상호 연관성을 갖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예산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지난해말 발표했을 때와 비교해 일부 하천의 지류가 대상에 포함되는 등 사업물량이 늘어나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다음달 국토해양부에서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때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19만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노무현정부때 발족한 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이날 오전 현판식을 열고 새출발을 선언했다. 최 위원장은 위원회 명칭 변경과 관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중앙정부 주도의 느낌이 강하고, ‘발전’이라는 말속에는 ‘성장’과 ‘균형’이라는 두가지 의미가 모두 포함돼 있어 ‘균형’이라는 단어를 뺐다”고 설명했다.

방송배기자 [bsb@munhwa.com](mailto:bsb@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